

---

서                      평

---

기 메탕 지음 / 김창진·강성희 역,

『루소포비아: 러시아 혐오의 국제정치와 서구의 위선』

(고양: 가을의 아침, 2022)

[영문판 Creating Russophobia –

From the Great Religious Schism to Anti-Putin Hysteria]



|서 평|

## 기 메탕 지음 / 김창진 · 강성희 역,

『루소포비아: 러시아 혐오의 국제정치와 서구의 위선』

(고양: 가을의 아침, 2022)

[영문판 Creating Russophobia-

From the Great Religious Schism to Anti-Putin Hysteria]

강 봉 구 (한양대학교)

탈소지역에 전쟁이 발발하였다(2022.02.24).

소련은 구제국들 가운데 국제적 열전의 패배 없이 전격 해체를 통해 소멸(1991.12.26)되었다는 점에서 예외적이었다. 또한 지속된 국가성 유지의 경험이 없는 14개 연방구성 민족들을 (내전 및 대규모 유혈 충돌 비용 없이) 독립국가로 놓아 주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희귀한 사례였다(전후 30년 동안 이어진 유럽 식민제국들의 탈식민 과정을 회고해 보라). 그래서 소련 말기에 연속된 개혁/개방과 민주주의적 체제전환 및 민족공화국들의 독립은 ‘비단혁명(velvet revolution)’으로 지칭되기까지 하였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원만하고 평화로웠던 이혼과 분리의 과정은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탈소공화국간 전면 ‘전쟁의 이름으로’ 고가의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고 착잡하다.

키예프와 전국 주요 지역에서 교전상황이 지속 중인 가운데,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서방(여기서는 대부분 ‘북미+유럽’을 의미)의 대다수 언론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러시아제국과 소련의 영토 확장사에서 반복되어 증명된 러시아(인)의 영토 팽창주의 본능, 소련제국을 복원하려는 푸틴 대통령의 제국주의적 야

십의 표출로 묘사하고 있다.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 배경, 그 의도, 전쟁 행태 등에 대한 서방 언론의 서술은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상당 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후자는 약 2세기 이상 누적되어 서구 사회의 무의식에 안착하다시피 한, (러시아와 러시아인에 대한 ‘혐오/공포증’을 의미하는) ‘루소포비아(Russophobia)’의 ‘이미지 서술(imagery)’ 논리의 전형을 보는 듯하다.

물론, 세계 1, 2위를 다투는 핵병기고를 보유한 군사강국 러시아가, 자국의 심각한 안보우려에 대한 서방의 고려 미비를 이유로, 자기보다 훨씬 약한 이웃나라를 침공하였으니,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루소포비아를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이러한 시기에 루소포비아를 그 형성사에서부터 최근의 국제정치현상에 대한 활용 사례까지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루소포비아: 러시아 혐오의 국제정치와 서구의 위선』이 출간되었다는 것은 그 시점 상 참으로 공교롭다.

한편으로, 루소포비아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 듯한 서방의 대다수 언론 취재/보도 내용 및 정치 지도자들의 연설과 반대 논조인 이 책의 ‘상식적’ 건설성이 의심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 주류의 시각/접근법과 극명히 대비되는 이 책의 논증이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다면, 그것은 러시아의 침공과 국제법 위반에 대한 온당한 변명이 되지 않는 못하더라도, 그 행위의 동기와 의도를 이해하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데 주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이 책은 러시아(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차별, 이중 기준의 적용, 부당한 프레이밍과 악마화 등의 전형적 사례를 사실관계 추적과 재확인 토대 위에서 분석한 보기 드문 ‘루소포비아’ 비판서이다. 이 책의 저자 기메탕(Guy Mettan)은 스위스의 주요 프랑스어 신문의 정기 칼럼니스트이며, 사회-정치 활동가이다. 1992-1998년 동안 <제네바 트리뷴>의 편집장과 대표를 역임하였으며, 민족 문제 및 사회-정치적 주제와 국제관계에 관한 많은 책을 집필하였다. 평생을 언론인으로서 활동해 온 저자는 이 주제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 기고문, 연설, 인터뷰, 보고서, 저널, 단행본

등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저널리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여기서 저널리즘 방식의 의미는 “가능한 가설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안하는 것을 과제”(본문 26쪽)로 삼았다는 의미이다. 러시아에서 발생한 사건과 서방 국가들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에 대해 서방 언론의 반응과 비판을 비교분석하였으며, 반러적인 서방 언론과 전문가들이 고의로 무시하거나 묵과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서방의 독립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하였다.

이 책은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는 서방 주요국 국민들이 러시아를 바라보는 편견과 차별의 시선으로서 루소포비아가 러시아에서 혹은 러시아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들에서 실제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에 대해 베슬란 인질 사태, 남오세티아 무력 충돌, 소치 올림픽 경기, 크림 병합 등에 대한 서방 언론의 시선과 보도행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왜, 어떻게 루소포비아 현상이 오늘날의 모습으로 고착화되었나에 대한 의문은 그 형성과정에 대한 2부의 탐구로 이어진다. 2부는 루소포비아 현상의 중세적 기원으로 파악한 유럽의 기독교 종교 대분열 즉, 로마 가톨릭과 동방 교회의 분열에서부터 시작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현재 서방 주요국에서의 루소포비아 형성사의 전개와 특성을 다루고 있다. 제3부는, 러시아의 “공격성에 대한 신화는 사실같은 악당의 이미지가 없이는 효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루소포비아가 러시아의 이미지를 침략자, 악당, 포악함으로 형상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 글은 저자가 루소포비아를 비판하는 주된 이유 및 근거, 그리고 이 책을 관통하는 저자의 주요 논지를 소개하고 논평하는 방식으로 핵심 내용을 개관하고자 한다. 루소포비아의 뿌리와 연관된 종교적 측면을 간단히 일견하는 것으로 검토를 시작한다.

저자는 루소포비아의 가장 오래된 연원을 유럽 기독교 교회의 분열이라는 종교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유럽인들에게 러시아 정교회에 대한 중요성이 유럽 교회 대분열이 완결(1054년)된 11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하나의 가정으로서, 저자는 988년 키예프 대공 블라디미

르1세가 헤르소네스에서 비잔티움 정교회 세례를 받지 않고, 대신에 로마 제국의 가톨릭 세례를 받았다면, 러시아는 더 쉽게 유럽 문화 및 정치공동체의 일원 자격을 부여받았을 것이라고 추론한다(182-84쪽). 동일한 기독교이지만, 이후의 역사 전개는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가 적지 않은(그 정도는 관찰자의 시각과 범주에 달려 있지만) 이질적인 문명/문화적 정체성 요인을 가미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지점이다. 그 이유는 현재 유럽의 지정학적 갈등의 단층선이 이 종교적 분리선과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현대 국민국가체제에서 타국의 국가이미지는 국가간 상호관계, 특히 동맹/제휴 관계 형성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간이 행위와 태도를 결정하는 데 진실보다는 사실, 사실보다는 인식/해석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국제정치이론의 표현을 빌면) 인간/집단/국가의 이해관계와 정체성이 사실에 토대하고 그것을 반영하여 고정되기 보다는, (사실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상호인식의 교환과정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재구성된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시각에서 본 서평은 루소포비아라는 행위/태도를 초래한 인식/해석의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할 것이다.

저자는 서방에서 루소포비아를 유발한 주된 이유는 러시아/소련의 제국주의적-영토적 팽창주의 그리고 전제정(혹은 권위주의) 성향, 크게 두 가지라고 본다. 첫째, 러시아의 영토 팽창주의는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으며, 그러한 제국주의적 팽창주의 성향은 러시아민족의 뱃속에 유전적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다. 루소포브(Russophobes, 러시아 혐오자)는, 역사를 거슬러 보자면, 콘스탄티노플의 함락(1453년) 이후, 러시아 정교의 ‘제3의 로마’ 발상 역시 메시아적 팽창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러시아의 팽창주의는 역사적 사실임이 분명하지만, 16세기 대항해 시대 개막이래 유럽의 팽창주의 역시 역사적 사실이다. 유럽 열강의 제국주의적 팽창의 전성기였던 1815-1900년까지의 기간을 보자면, 대영제국의 영토는 이 시기에 영국 자체의 20배를 넘게 팽창하였다. 미국은 인디언을

정복하며 서부 변경으로 나아가 태평양에 도달했으며, 하와이를 넘어 태평양의 여러 군도와 필리핀까지 차지하였다. 반면에 러시아는 캅카스, 베사라비아, 투르케스탄, 만주 일부 등을 차지하여 자기 영토의 25%를 확장하였을 뿐이다(282쪽). 동일한 팽창주의적 유전자를 타고 났더라도 그 실천 강도는 누가 더 센가?

이처럼 러시아의 모든 부정적 행태를 ‘팽창 본능+소비에트 제국 복원 열망’으로 설명한다면, 1991년 소련 지도부는 왜 제국을 저항 없이 해체하였는지를 질문해야 공정할 것이다. 제국주의 시대에 팽창을 거듭했던 세계 제국들 가운데 열전의 패배나 내전의 참상 없이 스스로 식민지(소련의 경우, 연방구성공화국들)를 독립국으로 놓아준 사례는 소련(러시아)이 유일하다는 점도 덧붙여야 한다. 서방 언론과 정치가들이 자주 인용하는 푸틴의 어록 중의 하나는 “20세기 최대 지정학적 비극은 소련의 해체”라는 문구이다. 그런데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이 인구에 회자되는 인용문이 통상 여기서 멈추어버린다는 점이다. 그 바로 뒤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소련 제국을 복원하겠다고 나서는 자는 두뇌를 갖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바로 이 뒷부분, 더 중요한 (현재/미래의 의도를 언급한) 메시지에 대한 누락이 의도적인 것이라면, (푸틴으로 대표되는) 러시아인의 팽창주의 유전자에 근거한 러시아/소련 제국의 복원 및 제국주의적 침략근성에 대한 단정은 역사적 사실보다는 동방 정교와 러시아인에 대한 서방의 부정적 시선, 반감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한 사례일 것이다.

다음으로 루소포비아를 유발하는 이유는 러시아의 통치 체제로서 전제정, 그리고 국가/사회/개인 관계에서 ‘태생적 권위주의’ 및 언론자유와 인권에 대한 침해의 이미지이다. ‘푸틴식 체제’로 지칭되는 러시아 거버넌스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조금만 더 치우치면, 전제정으로 이미지화된다. 즉, ‘강한 국가’, 강력한 지도자의 ‘철권’을 휘두르며 “‘자신의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하여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470쪽)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는 러시아는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해를 끼치는 국가이다. 여기서 푸

턴 대통령은 ‘새로운 전제 군주’ 혹은 ‘권위주의적 폭군’으로 지칭된다 (378쪽). 루소포브의 관점에서, 이러한 지도자에게 (합법적으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색깔혁명은 정당화되어야 마땅하다. 키예프의 ‘유로마이단’ 시위와 정부 전복은 모스크바가 말하는 ‘쿠테타’가 아니라 온당한 ‘정치 혁명’이다.

전제정, 권위주의 등과 관련하여 루소포브가 그리는 러시아와 러시아인 (대표자로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서술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는 낙후, 야만성, 저발전,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타국 영토를 탐내며, 민족적 소비니즘에 경도하여 과거의 제국 지위를 복원하고자 하며, 모스크바공국 이래의 전통인 전제 권력을 당연시 한다. ‘현대판 짜르’, 러시아인의 대표자인 대통령의 초상은, KGB의 아들, 반민주주의자, 반자유주의자, 유럽-미국적 이상에 대한 광적 반대자로 그려진다. “전제적, 공산주의적 통치 체제에 딱 맞는 계승자로서 유일하게 힘의 언어만을 이해한다. 그는 과거의 인간이기 때문에 딱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푸틴식 거버넌스의 이념적 표현인 ‘푸틴주의’는 “민족 소속성에 대한 조작된 생각에 의지해 잃어버린 힘을 되찾으려고 하는 목적을 지닌 민족주의이다.”(102-103).

러시아에 대한 이같은 부정적 이미지 서술은 국제정치의 동맹/제휴 선택 문제에서 루소포브에게 다음처럼 적용된다. 러시아는 “본질적으로 권위주의적 관습과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확장을 꿈꾸”고 있으며, 이웃나라의 주권과 동맹/제휴 선택권을 인정하기를 거부한다고 간주된다. 러시아가 자신을 중심으로 탈소지역의 위계질서를 재구축하려는 야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나토는 러시아 꿈을 저지하려는 원래의 목표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반면, 루소포브의 이러한 전형적인 시각과는 상반되게, 1990년대 말 나토 확장에 적극 반대한 사람이 냉전 초입 대소 봉쇄정책의 입안자인, 1949년 당시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이었던, 조지 캐넌이라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이다. 캐넌은 유럽-대서양 세계의 나토 확장 정책에 대해, “나는 이것이 비극적 실수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행동할 그 어떤 이유도 없었다. 아무도 누군가를 위협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구는: 서평자] 자신들의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대신 서구는 자신들의 지나친 공격성에 대항하러 한다고 러시아를 벌할 것이다.” (117쪽).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안보 자결권(동맹/제휴 선택권) 행사를 둘러싼 나토와 러시아간 갈등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역시, 이미 30년이 지난 냉전 종식기의 ‘비대칭적 냉전 종결’과 나토 동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비대칭적(asymmetric)’이란 미소간 몰타 정상회담(1989년 12월)에서 냉전 종식을 선언한 이후, 동유럽의 집단안보를 위한 소련 주도 바르샤바조약기구는 해체(1991년 7월)로 정리된 반면, 런던선언(1990년 7월)에서 천명되었던 나토의 정치기구로의 성격 변화는 이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30년이 경과하는 동안, 약속과는 반대로 나토의 점진적 동진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토/EU와 러시아 간에 유럽대륙 전체 안보구도(security architecture)에 대한 논의 필요성은, 이를 의제로 삼은 어떤 국제회의도 개최하지 못한 채, 냉전 승리자의 입장에 섰던 서방의 이해관계와 권력의 논리, 일방적 원칙론(일례로 개별 국가의 동맹/제휴 선택권) 주장에 따라 표류해 왔다. 양방간 내연하던 갈등은 1막의 에피소드로 끝난 러시아평화유지군의 프리스티나 진군(1999년 6월)에서부터 시작하여 2008년 조지아 전쟁, 2013년 가을-겨울의 키예프 유로마이단 시위, 2014년 3월 크림병합, 2014년 4월 이후 돈바스 내전 등으로 분출되어 왔다.

이처럼 30년의 저강도 갈등 끝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우려에 무력 침공으로 대항하였으며, 국제법규를 위반한 선제적 자력구제의 대가로 서방과 국제사회의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내전 종식과 함께 30년 동안 전개되어 온 나토 동진의 복합 층위 갈등사를 유럽안보구도 미합의라는 국제정치의 큰 맥락을 도외시한 채, 그리고 탈소지역에서 간헐적으로 분출되어 왔던 무력 충돌과 전쟁을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영토 팽창 야심, 국내정치적 요인 등에 초점을 두고 설명한다는 것은 다각적

영향 요인들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이며 불균형한 비중 부여로 보인다.

주요 국가에서의 루소포비아 현상의 근원과 전개를 다룬 2부에서 서평자에게 흥미로웠던 부분은 앵글로색슨의 후예인 영국과 미국의 사례이다. 특히 전후 자유자본주의 세계체제를 설계하고 운영해 왔으며, 냉전 후 약 20년 이상 일극 세계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에서 특히 루소포비아가 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특히 소련 해체 이후에도, 지속되는 냉전의 관성 속에서, 미국의 루소포비아는 약화되기는커녕, 러시아의 국가성이 강화된 2000년대 중반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그 이유들 중의 하나가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기고문(2007.11.09.)에서 명료하게 표현되고 있다. 소련과의 냉전 승리 이후, “단결된 서방 국가들은 과거의 모든 것보다 더 나쁜 모델과 마주쳤다.”(339쪽)는 것이다.

서평자가 보기에 중국은 공산당의 영도 하에 사회주의체제라는 행색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러시아의 정치-경제체제는 자유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후에, 이로부터 변형하고 일탈하였다는 점에서 미국의 루소포비아에게 더 큰 분노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분노의 역사적 뿌리는 서부 팽창기 미국인들이 믿었던 ‘명백한 천명(manifest destiny)’의 시대, 당시 공화적 보수주의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조슈아 스트롱의 『우리 조국』(1885년)에서 찾을 수 있다. 스트롱은 앵글로색슨이 “이 세상에 민주주의, 개신교 및 자유 기업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342쪽)는 사명감으로 국제문제에 관여하고 문명개화에 봉사해 왔다고 자부한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1세기도 더 지난, 1990년대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 러시아가 (비자유)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를 자신의 독자적 발전모델로 추구한다는 것은 과거 소련식 현실사회주의 모델보다 더 일탈적인 (앵글로색슨의 글로벌 기여에 대한) 배은망덕의 소치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저자가 루소포비아를 수동적 혐오와 능동적/공격적 혐오가 혼재한 복합적 감정으로 파악한 것도 이 현상의 좀 더 깊은 이해에 도움이 된다. “갑자기 약해진 러시아에서 서구에게 유리한 체제를 구축하

여 러시아의 자원을 탈취하려는 수동적 혐오”가 존재하는 동시에, “러시아가 힘을 회복했을 때 살아나는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루소포비아가 존재한다. 1990년대 엘친 시대 서방의 루소포비아가 수동적 혐오였다면, 푸틴 대통령 집권 초부터 법적 위계질서 확립, 상하원 선거제도 및 연방체제 개편 등을 통한 권력 수직화와 중앙집권화에 힘입어 러시아의 국가성이 강화된 2000년 대 중반 이후의 루소포비아는 공격성을 띠고 있다. 공격적 루소포비아는 “러시아가 너무 많은 독립성과 영향력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견제”할 목적이다(47-48쪽). 이 경우, 루소포비아는 단순한 감정 표출도 편견도 아닌 역학관계, 권력관계의 표현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타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고의로 적대적인 입장으로,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적어도 그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의도이다.”(53쪽). 공격적 루소포비아는 러시아와 서방 간의 대립 관계가 고조되는 반면, 중립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현재의 국제 제후관계에서 더욱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기제이다.

이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또 하나의 논점은 러시아를 ‘우리’가 아닌 ‘그들’로 타자화하는 것의 부수효과에 관한 것이다. 저자는 서구가 러시아를 ‘이웃한 유럽 나라’로부터 ‘유럽의 이웃 나라’로 유럽적 정체성에서 거리를 두는 것은 러시아의 타자성이 유럽의 정체성 확인과 통합성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루소포비아로 대표되는 “러시아의 타자성(Russian otherness)에 대한 이런 부정적 담론이 서구에 필요한 까닭은 서구의 정체성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음을, 혹은 여전히 불완전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열되고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은 자신의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와 같은 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26쪽). 서구가 자신의 정체성 확인과 견고화를 위해 타자로 대상화되어야 하는 존재로서 루소포비아를 위치지우고 이용하는 것은, 그리고 러시아(인)를 타자화하려고 왜곡하거나 가공의 ‘악당’ ‘열등’ ‘미개’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루소포비아 이미지와 내러티브 비판에 대한 루소포브 측의 가장 단순

한 반박은 “러시아 사회의 지배자들 사이에서 본능적인 반서구 또는 반미 정서가 존재했고, 서구는 그에 대응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27쪽).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루소포비아 현상의 근원과 책임을 러시아인과 러시아 사회에 떠넘기는 교묘한 논리를 대변한다. 이 책의 전체를 관통하여 루소포비아에 대한 저자의 비판적 논증은 바로 이점을 논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러시아 관련 주요 사건과 국제정치를 다루는 서방 언론과 정치인들의 시각과 해석에서 루소포비아 작동의 심리적 기제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2부에서 주요 서방 국가들에서 발현되어 온 루소포비아의 역사적 연원을 폭넓고 심도 있게 추적하는 것은 바로 그 근원과 전개 과정을 보다 객관적 근거 위에서 밝히기 위한 목적이다.

이 책은 루소포비아를 수행하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 연구자 및 언론기자 등 지식인 일반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지식인의 ‘고전적’ 책무를 다시 일깨우는 죽비처럼 다가온다. 저자는 자신이 선 자리에서 서방의 루소포비아에 대해 일관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지만, 그 방식은 품격을 유지한다. 저자의 주제들에 대한 논증 방식이 정면 돌파를 피하지 않으며, 문체는 직설적이고, 때로는 도전적이라고 해도 수사적 목적을 넘어선 과도한 자기주장과 감정의 분출은 온당하게 자제되고 있다. 저자는 루소포비아 비판의 역사적·객관적 근거를 중시하는 기본적 접근방식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작업이 반서방 감정을 자극하는 것으로 오도될 여지를 줄이고자 경계하고 있다. “이 책은 절대로 서구에 반대하는 감정을 부추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러시아에 대한 증오의 기원을 찾아내는 것이 곧 프랑스 혁명 이후 서구가 지켜왔던 민주주의, 자유, 인권과 같은 문명의 업적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또한 푸틴 정권에 대한 그 어떤 환호도 아니다. 정말로 수상쩍은 서구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곧 러시아가 저지른 실패를 정당화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23-24쪽).

이 책의 프랑스어 출간이 2015년이기에 루소포비아의 전형적 발현 사례들로서 주로 그 직전의 뜨거운 국제이슈였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특히 유로마이단 시위에서부터 크림병합에 이르는 사건들이 비중있게 다루어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 및 전후 맥락에서 크게 다른 점이 있지만, 러시아와 서방간 갈등의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비난 담론에서 루소포비아의 서사는 거의 유사하게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비교가 가능하다.

이 주제에 대해 국내에서 단행본으로 처음 출간된 이 책은 시각과 분석의 독창성 외에도 칭찬받을 점이 많다. 30년 이상 소련-러시아를 연구해 온 김창진 교수의 주관 하에 러시아어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번역은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명료하다. 또 쉬운 문체로 윤풀되어 있어 가독성이 좋다. 일부 고유명사의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지만(일례로 377쪽, 체르케스 민족명칭), 전체적으로 용어 사용례는 정확하다. 드물게 오기도 보이지만, 문맥상 바른 이해가 가능한 부분들이다. 군데군데 필요한 곳마다 충실한 역자주가 들어 있어서 일반 독자들이 본문의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는 데 무척 유용하다.

30년 동안 내연하던 저강도 갈등이 분출하여, 전쟁의 참화가 진행 중인 시기에 이 책을 읽는 의미는 남다르다. 폭넓은 범위의 커버리지, 배경 맥락을 놓치지 않은 심도 있는 분석, 인식과 평가의 공정함에 대한 예리한 시선, 주류 미디어의 국제적 사건 보도에서 소외/배제된 목소리 대변 등 책의 미덕은 일부 부족한 점들을 사소한 것으로 만든다. 국제문제의 가장 뜨거운 이슈와 직접 연관된 이 주제를 좀 더 넓고 열린 시각에서 역사적으로 깊이 호흡하며 이해하고 싶은 지적 호기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